

1조 7000억 상생금융 푼다…광주·전남 제조업계 수혜 기대

중기부 상생전략 발표…수주·수출 성과 중소기업에 환류

현대·기아·포스코 협력 중소기업 금융·수출 지원도 확대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을 본격 가동하면서 자동차·철강 협력 업체 등이 밀집한 광주·전남 제조 업계도 다양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번 대책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가 협력 중소기업까지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수주·수출 성과 공유 확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 경로 강화 ▲온라인·금융·방산으로의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확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지역 내에서 기대되는 대목은 상생금융 확대다.

현대·기아차와 금융권이 출연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1조 3000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포스코와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참여하는 철강 산업 수출 공급망 자금 4000억원도 새로 공급된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금융 기관을 통해 지원이 어려웠던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삼성전자, 광주글로벌모터스(GGM),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대기업 생산거점으로 자리 잡은 광주·전남은 협력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상생금융과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직접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국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수출·수주 금융도 우대하기로 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지역 산업과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지난해 8개에서 올해 20개로 확대하고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100개 구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부품과 금속 가공 등 협력 업체가 밀집한 지역 제조 현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과제에 대기업 지

원을 매칭하는 중소기업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중소기업 안전 보건 상생협력 사업이 건설업 포함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대기업 생산 기지가 있는 광주·전남 특성상 이번 상생 전략이 현장 제감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며 “금융·수출 지원이 지역 대기업 협력 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관 기관과 함께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안착 여부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NICE평가정보와 ‘생산적 금융 확대’ 업무협약

성장 가능성 지역기업 발굴·지원

광주은행은 21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NICE평가정보㈜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 데이터 기반 ‘생산적 금융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NICE평가정보의 데이터 분석 역량과 광주은행의 지역 밀착형 영업망을 결합해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금융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실물경제와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은행 최초로 ESG 데이터를 기업 평가에 활용해 재무 요소와 비재무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에 발맞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인증 결과를 여신심사에 적극 반영해 친환경·저탄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지역 경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실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생산적 금융의 도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

역민과 지역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파 속에서 보일러 꺼지지 않게 하려면 배관 보온재 감싸고 외출때도 켜 두세요

귀뚜라미, 동결예방 안내

전국을 강타한 한파 속에서 보일러가 꺼지지 않게 하려면 보일러와 연결된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야 한다. 한파가 지속될 때는 보일러 전원은 상시 연결하는 게 중요하고 외출할 때도 보일러를 끄면 안 된다.

㈜귀뚜라미는 21일 이런 내용의 혹한기 보일러 관리와 난방 전략을 안내했다. 귀뚜라미에 따르면 겨울철 보일러 동결 사고는 대부분 물이 흐르는 배관에서 발생한다.

보일러와 연결된 직수·난방·온수·응축수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 외부 냉기를 차단해야 하며, 훼손되거나 오래된 보온재는 교체하는 것이 좋다.

귀뚜라미보일러에는 난방수 온도가 8℃ 이하로 떨어지면 순환펌프를 가동하고, 5℃ 이하에서는 자동으로 난방을 시작하는 ‘2단계 동결 방지 기능’이 적용돼 있다.

다만 전원이 차단되면 작동하지 않아 한파가 지속될 때는 보일러 전원을 상시 연결하고 가스 밸브와 분배기 밸브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완전히 끄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동파 위험이 커지고 귀가 후 재가동 과정에서 오히려 난방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보일러를 끄기보다 실내 설정 온도를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설치 후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보일러는 열효율 저하로 난방비가 늘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는 만큼 교체가 필요하다. 보일러나 배관이 동결됐을 경우에 증상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온수가 나오지 않으면 직수나 온수 배관의 동결을 의심해 보온재를 제거한 뒤 50~60℃의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여야 한다. 난방해도 바닥이 차가운 경우에는 제조사 고객센터나 전문 설비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고환율에 원자재·물류 비용 부담 가중…지역 경제 대응 방안 필요”

광주경총 “경기 충격 방지책 필요”

최근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역 제조업과 서민 가계, 자영업 등을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환율은 광주·전남 수출 기업에 일부 긍정 요인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경총에 따르면 광주·전남 제조 업체들은 올해 경기 전망에서 고환율과 환율 변동성을 주요 우려 요인으로 꼽으며 투자 확대보다는 기존 설비 유지·안정 경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

은 중견·중소 제조업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단기 수출 단가 경쟁력은 상승했지만, 동시에 수입 원자재·부품 가격이 올라 수익성이 압박받는 위기를 겪고 있다.

광주경총은 고환율이 철강·식품 등 원부자재 수입 기업의 환차손과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며 지역 제조업 전반의 원가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너지·유가와 연계된 운송·물류 비용도 고환율과 함께 변동성이 커져 광주·전남처럼 물류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제조·유통 기업에 비용 부담을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이 수입 식재료와 커피·차·빵·곡물·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

면서 밥상 물가와 외식 물가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도 내놨다. 광주경총은 가공식품 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의 체감 물가와 실질 구매력 약화를 우려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전남지역이 환변동 보험 활용, 수입선 다변화, 재고 전략 등을 통해 고환율·변동성 위험 관리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지자체·유관 기관은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에너지 부담 완화 지원, 수출 기업 금융 지원, 취약계층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을 병행해야 지역 경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유명 수제맥주 맛 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다양한 수제맥주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5일까지 지하 1층 와인매장 옆 행사장에서 ‘데이블블루잉 수제맥주’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더 테이블블루잉 수제맥주는 대한민국 주류대상 수제맥주 에일 부문에서 대상을 5차례 수상한 브랜드로, 이번 팝업에서는 ‘데이블 IPA’ 등 유명 수제맥주들을 만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지방 기업·사업자 예대율 완화…자금공급 확대

은행권 대출 여력 최대 21조 늘어

금융당국이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비수도권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원가량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의 ‘은

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環이다.

금융위는 앞서 정책금융 분야에서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지방 공급 비중을 2025년 약 40%에서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p) 이상 높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은행권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p를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다.

금융위는 2025년 기준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과징금 2720억원

공정위 “2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은행은 흔적을 안남기려 LTV 정보 등을 인쇄물로 주고받는 등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 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함께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은행의 정보교환 담합을 인정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은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에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전원회의를 거

쳐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4개 은행은 자신이 설정한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낮췄으며, 반대로 타 은행보다 낮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높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문제가 된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 수준이었다.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시총 500대 기업 지난해 자사주 21조원 소각

삼성전자 3조487억 1위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의 지난해 자사주 소각 규모가 2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시총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신규 상장사를 제외한 47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개 기업이 20조9955억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3조487억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해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소각 금액의 14.5%에 해당한다. HMM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사주 2조1432억원어치를 매입해 전량 소각했고,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야연도 전년도에 매입한 자사주 가운데 1조8156억원어치를 소각했다.

이어 메리츠금융지주(1조5517억원), KB금융(1조200억원), 삼성물산(9322억원), KT&G(9263억원), 현대차(9160억원)도 자사주 소각 상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자사주 처분 규모는 108개사 3조 1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4.7%인 2조245억원은 임직원 보상을 위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임직원 보상용으로 는 현대차가 53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사주를 처

분했고, 삼성전자(3429억원)와 SK하이닉스(3076억원)가 뒤를 이었다.

자금 조달 목적의 자사주 처분도 7295억원(23.3%)에 달했다. 롯데지주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47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롯데물산에 처분했다. 지난해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은 102곳으로 총 21조원을 달했다.

삼성전자가 8조18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HMM(2조1432억원), KB금융(1조4800억원), 메리츠금융지주(1조3173억원), 신한지주(1조 2500억원) 순이었다. CEO스코어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비해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4909.93 (+24.18)
↓ 코스닥	951.29 (-25.08)
↓ 금리(국고채 3년)	3.150 (-0.041)
↓ 환율(US D) <오후 4시 00분 기준>	1470.65 (-7.45)